

'망국적 한미FTA' 민주노총 총력투쟁 돌입

8 편집국 | ㉠ 승인 2011.11.30 10:15

| 9일 2차 확대간부 파업-범국민대회 등 국민총궐기 앞장

민주노총이 지난 22일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 지 하루만인 23일 오전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한미FTA날치기 무효! 이명박 퇴진!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를 각 조직에 전달하며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24일 하루동안 1만여명 규모의 확대간부파업에 돌입하고 오후 3시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FTA 날치기통과 무효! 이명박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에 총집결했다. 단위노조는 현장별로 FTA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열리는 촛불집회에도 조직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29일 열리는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미FTA 폐기를 위한 보다 강도 높은 투쟁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9일에는 2차 확대간부 파업에 돌입, 12월 3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대회에도 전국노동자대회 이상의 규모로 조합원들을 조직해 참여한다. 정호희 대변인은 "한미FTA 날치기 처리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한미FTA 반대투쟁에 모든 조직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6년 신한국당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가 날치기 세력 무덤이 됐듯, 2011년 한미FTA 날치기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무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면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금속노조도 이날 산하 지부·지회에 긴급 투쟁지침을 하달했다. 노조 소속 전 사업장에 '한미FTA 날치기통과 무효! 이명박 정권퇴진!'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세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도 성명에서 "한미FTA 핵심 조항인 '투자' 조항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의 철폐 혹은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는 공기업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침투로 이어질 것"이라며 "철도·의료·연금 등의 공공성 파괴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들과 야당대표들도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민의를 짓밟고 날치기를 강행한 한미FTA 비준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12월 9일 본회의까지 한미FTA 날치기 무효화를 위해 공동으로 연대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이들은 한미FTA저지범국본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이 함께 한미FTA 날치기 비준 무효화와 MB-한나라당 심판사업을 전개하는 '(가칭) 한미FTA 날치기 국회비준 무효화와 MB 한나라당 심판 비상연석회의'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편집국 kctuedit@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